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11일 (음력 10월 24일) 월요일

## 광주시 채무 1조원 '눈앞'...재정 위기 현실화

광주시의 채무 잔액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연도별 채무현황에 따르면 채무잔액은 2011년 7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532억원, 2013년 7987억원, 2014년 8922억원, 2015년 9754억원, 지난해 9550억원에 이르렀다.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로 2015년에 채무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

채무잔액, 2011년 7476억→ 지난해 9550억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 현실맞게 조정해야”

다.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시설비로 2012년부터 해마다 최소 40억원, 땀겨는 620억원의 빚이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액도 2012년 56억원, 2013

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2015년 832억원 등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이 6.11%로, 2013년 중기재정계획이 정한 3.7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11년 20.75%, 2012년 20.65%, 2013년 20.07%, 2014년 21.50%, 2015년 21.69%, 2016년 21.5%로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러면 채무잔액은 내년에 9416억원을 기록한 다음 세계수영대회가 열리는 2019년에 1조166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채무잔액이 1조16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채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 프로젝트와 현안사업이 줄줄이 대기중이어서 쓸 곳이 많고, 인구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어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세계수영대회의 경우 총사업비 1935억원 중 순수 시비만 714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도시철도 2호선도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6대 4여서 총사업비 2조원 중 8000억원 상당을 시민 혈세로 메꿔야 할 처지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와 이전부지 개발을 비롯해 공원인물제 토지보상비, 어등산관광단지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시비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 세원(稅源) 조정 등을 통한 재정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 첫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40조원을 돌파하면서 광주시에 5개 구청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매칭 사업비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재정지립도는 전국 최하위면서 복지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로선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의회 이정현(광산) 운영위원장은 “비효율적인 사업은 사전에 통제하고, 채무발행 사업은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 윤장현 광주시장이 9일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열린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김성환 동구청장 등 내빈들과 상금을 자선냄비에 넣고 있다. 올해 광주지역 자선냄비 모금액 목표는 1200만원이다



이거 뭐지?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받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5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 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변호사는 5일 방송된 채널A의 외부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프리카 국가들에게 약속한 부분 (이프리카 순방 당시 한국형 발전 모델 전수를 상황 변화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걱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매우 비려심이 많고 소탈하며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을 한다”며 발언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이어 “두 번째로는 (삼성 협력 기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언급 개혁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고 설 때마다 약간 소리를 내면서 불편해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의욕을 상실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안민석

주춘정 기자

## 법원 “한빛원전 인근 해역 어업면허 발급 취소하라”

“다른 어민들과 형평성 맞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면허를 발급한 영광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 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한빛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면허 처분 취소 청구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빛원전은 영광군 흥농읍 계마리 일대

에서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다.

영광군은 2016년 7월1일 모 조합법인 외 어민 12명에게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업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영광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에 한수원은 “한빛원전의 건설계획이 1991년에 이뤄졌으며, 해당 해역에서 어업권을 취득한 어민들을 상대로 폐업보

상을 완료했다. 영광군은 해당 해역에서의 신규 어업면허를 발급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어민들은 1995~1996년 영광군으로부터 해당 해역에서 ‘원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권을 가진 포기한다’라는 부관이 부착된 어업면허(유효기간 10년)를 받았으며, 이후 영광군으로부터 유효기간을 1차례 연장 받아 20년간 어업활동을 했다.

재판부는 “해수부와 전남도 지침에 따르면 영광군은 이미 폐업보상이 마쳐진 해역에 대해서는 신규 어업면허(어업면허의 기간이 만료된 어민들에게 어장 재개발에 따

라 새롭게 어업면허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포함)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군이 기존 어업면허의 기간이 만료된 이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업면허까지 발급해 주는 것은 폐업보상을 받고 어업활동을 중단한 다른 어민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어민들은 한빛원전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뒤 어업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임에도 수산양양에서 정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인 20년 동안 이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며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주춘정 기자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

# 2017 담양 산타축제

2017 DAMYANG SANTA FESTIVAL

12.15 ~ 12.31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